민주 당대표 후보들 "전북발전 선봉장"

전북지역 당대표·최고위원 합동연설회

송영길 "전북을 탄소·농업금융산업 메카로 발전"
홍영표 "일자리 문제 최우선, 군산형 일자리 챙길 것"
우원식 "독자적 강소권 메가시티 자리매김 돕겠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북 합동연설회가 20일 오후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북 합동연설회에 나선 홍영표·송영길·우원식 후보(기호순)들이 전북 발전의 선봉장이 되겠다며 당원과 도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20일 오후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전북지역 당대표 및 최고위원 합동연설회가 열렸다.

먼저 진행된 당 대표 연설에서 기호 2번 송영길 후보는 "전라북도는 에너지, 탄소, 농업금융 산업의 메카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탄소 산업의 기준은 이제 전라북도인만큼 전북을 탄소 산업 클러스터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와야 한다. 자동차, 조선, 에너지 신소재 기업 유치를 적극 지원 하겠다"고 했다.

송 후보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전북 금융중심지를 잊지 않았다"면서 "미국 공무원 연기금이 위치한 새크라멘토처럼 자산운용과 농업금융 중심지로 키우기 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1번 홍영표 후보는 "고향인 전북에 와서 기쁘지만 요즘 고향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걱정이 많다"며 "균형발전, 저출산 문제 해결이 내 고향을 지키고 살리는 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홍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 대표가 되면 전북의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민생 문제로 챙기겠다"는 약속과 함께 "양대 노총이 상생협약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군산형일자리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민생'을 내건 기호 3번 우원식 후보는 "전북의 미래먹거리를 흔들림없이 챙기겠다"며 "금융특화, 새만금 계획과 더불어 전북을 독자적 강소권 메가시티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호남권 에너지경제공동체 RE300을 분명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후보는 "저 우원식, 전북 명예도민으로 밥값, 확실하게 하겠다"며 "다시는 민주당이 전북을 소외시켰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표심을 공략했다.

/유호상기자

도의회 환복위, 현지의정활동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20일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현장과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을 방문해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위원들은 먼저,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내 선도사업지구에 위치한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현장을 방문, 지난해 12월 이후 착공한 매립공사 진행상황 및 현황보고를 청취했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6.6㎢(200만평) 규모의 부지에 약 2만5,000명이 거주하는 자족 도시로 조성된다.

총 사업비는 약 1조3,000억원이 투입되며, 2024년에 용지매립 및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지난달 18일 개장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 중인,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군산시 소재)을 방문해 사업운영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태양전망대·커뮤니티센터 등 주요 시설현황을 점검했다.

이명연 위원장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관계 공무원에게 "도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쾌적한 휴양 공간 확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 "앞으로도 전북도의회는 각종 사업 현장을 수시로 찾아가 정책점검과 더불어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 5분 발언

"학교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 시스템 마련 시급"

김희수 도의원 "전문성 미흡 설비 가동 효율성 저하"

전북도내 학교에 설치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위원장(전주6·교육위원회)은 지난 19일 제38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교육청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따르면 신축, 증축, 개축되는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에 있어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2020년 기준 공급의무 비율은 30%이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상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도내 학교시설에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활용한 242개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최근 10년 동안 70개의 시설에만 약 226억이 투자됐다.

김희수 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적이고 전문성 있는 유지관리가 필수적"이지만 "관심부족과 전문성 미흡으로 일상적인 점검과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설비 가동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관련 업무를 신규 기술직 공무원이나 경력이 낮은 일반직 공무원이 전담하고 있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관심부족과 관련 예산을 학교 일반운영비로 충당"하는 등의 문제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이제 필수적인 학교시설이 되었음에도 도교육청이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고, 일선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희수 위원장은 "업무담당자 맞춤형 교육훈련, 전담지원 인력 구성, 예산 확보등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학교시설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부응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건축자산,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오평근 도의원 "전북 토탈관광 외연확장 위해"

전북도의회 오평근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2)은 지난 19일 제3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북도 토탈관광의 외연확장을 위해 건축자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건축자산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역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공간환경·기반시설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된다.

건축공간연구원에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는 총 19만1,427개의 다양한 건축자산이 분포돼 있으며, 특히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자산이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건축자산은 전북도 및 도민의 일상과 흔적들이 담겨있는 전북도의 고유 자산이지만, 대부분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활용된 사례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도내 14개 시·군에 산재한 건축자산에 내재된 무형의 가치와 콘텐츠에 주목하고 이를 지역의 관광콘텐츠와 연계시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오 의원의 주장이다.

오 의원은 건축자산을 지역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건축자산 중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후보군 발굴, ▲ 뉴트로, 언택트 등 신규 관광트렌드를 반영하고 도내 인기 여행지와 관광지를 연계한 새로운 관광루트 개발, ▲ 활용가치가 높은 건축자산의 선도적인 매입, 임대 등을 통한 지역 관광거점 확충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그는 "지역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경쟁은 갈수록 고도화 되고 있다"면서 "전북도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자산을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도내 대학과 새로운 협력체계 모색을"

김정수 도의원, 지자체-도내 대학 협력센터 설치 주장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이 도내 대학과의 새로운 협력체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는 급변한 사회를 맞이한 민·관·산·학 등 모든 도민들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는 체계를 구축해 전북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의회 김정수(익산2·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38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도 번영·발전을 위해 지역과 도내 대학 그리고, 지역산업과의 단단한 연결고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새롭게 상생협력체계를 구축, 이를 위해 '지자체-도내 대학 협력센터' 설치"를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 가속화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발전의 동력마저 위축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고급인력을 도 발전인력으로 양산해내는 도내 소재 대학들과 이를 지원하고 바탕이 되어줄 지자체 역할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의원은 "도내 대학은 전북도 발전과 유지를 위한 인적·물적 집약체다"면서 "전북의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자원을 위해 상생협력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노인체육진흥조례' 계류의안으로 처리

도내 시군체육회장단 체육 진흥 혼선 우려 조례안 철회 요구

최찬욱 도의원 비롯 문건위원 논의 끝 개정 입법으로 선회

최찬욱 전북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도내 14개 시·군체육회장단이 반대의견을 밝힌 것과 관련, 소관 상임위인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해당 조례안을 심사하지 않고 현행 전북도체육진흥조례에 노인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담아서 개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찬욱 의원은 지난 19일 개회한 제380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후 입법예고 기간 중 조례안 발의에 관한 보도자료를 접한 시군 체육회장단이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지난 1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개적으로 의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최 의원을 비롯한 문화건설안전위원들은 시군체육회장단의 우려를 수용, 향후 해당 조례안을 심사하지 않고 계류의안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한편, 전북도체육진흥조례에 노인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담는 개정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될 경우 노인체육진흥조례안은 11대 도의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된다.

최 의원은 "조례안 발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설명하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군체육회장단의 우려가 생각보다 컸던 것 같다"면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별도로 시.군체육회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신규 조례 제정이 아닌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향후 개정입법 과정에서도 시.군체육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지역 체육진흥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김치산업 육성방안 마련 절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관련분야 전문가와 좌담

"산업 확장력 큰 만큼 업계·농가 등 협력 이뤄져야"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지역 농가와 외식업 등의 활로 모색을 위해서라도 김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20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정명례 한국외식업중앙회 완산구지부장과 이승제 전북도생물산업진흥원 농생명융합팀장, 장영수 원광대 교수, 송미령 제이엔에스글로벌 대표, 전북도청 농식품산업국 관계자들과 '전북도 김치산업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좌담회를 열었다.

송 의장은 "김치는 전북대표 음식문화인데, 상품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김치산업이 지니는 순기능을 고려할 때 체계적인 산업화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제 팀장은 "타 지역과의 차별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전북형 김치산업을 모색해야 한다"며 "특화 및 기능성김치와 가정간편식(HMR) 제품 발굴, 표준화된 매뉴얼 마련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장영수 교수는 "김치 소비가 줄고 있는 만큼 세대별 대상별 맞춤형 홍보와 연구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와 교육을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장은 "김치 소비는 농산물 소비와 직결되는데다, 문화체험과 관광 등 산업 확장력이 큰 만큼 관련 업계와 농가, 지자체의 협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김치산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육성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인구구조 변화 능동 대처

이미숙 전주시의원 발의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통과

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전주지역 인구 구조 변화에 능동 대처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해당 조례안은 지역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인구의 증감과 구조적 변화에 대응, 각종 정책을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20일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이미숙 의원(부의장, 효자4·5동)이 전날 열린 제380회 1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미숙 의원을 포함한 의원 20명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조례안에는 전주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 수립,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구 구조 변화에 능동 대처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자는 의미도 담았다.

해당 조례안은 전주시장이 인구 감소와 구조적 변화의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지역별 인구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과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다. 특히 인구 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개정하는 경우, 인구정책기본조례를 우선해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한 인구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사업·시책 발굴, 인구교육을 비롯한 관련 정책을 전문가와 기관·단체 등과 협의해 수립·시행하는 사항도 마련했다.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사업 발굴·추진에 관한 내용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조례 6조는 인구정책에 관한 기초적 조사·연구는 물론, 인구 유출 방지와 유입 활성화,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 일과 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민관협력, 청년층 및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담았다.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인구정책위원회를 신설해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들어있다.

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인식 개선 등을 확산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하는 내용은 조례를 통한 각종 사업의 내실화의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안은 23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김윤상기자